

## 명사컬럼



# 하이닉스 공장 증설 문제

하이닉스 문제는 정치적 타협이나 힘의 논리가 아닌 법과 원칙에 따라 풀어야 한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인프라나 인력 충원 등의 아쉬움이 있을 수 있지만, 지자체들은 앞 다투어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고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하는 등 기업을 유치하는 데 어느 때보다도 적극적이다.



열린우리당·청주홍덕을  
국회의원 노영민  
02)788-2580

지난 1월25일 정부는 하이닉스의 이천 공장 증설 계획과 관련, 하이닉스측이 08년 공장증설 대상지로 밝힌 이천 지역에 대해 공식적으로 공장 증설을 허용하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이천 지역이 수도권 2,300만명의 식수원인 상수원보호구역이자 자연보전권역에 포함되어 있어 추가적인 공장 증설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원칙적인 이유에서다.

이천 지역은 현행 환경법령상 수질보전특별대책권역이자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 구리배출시설의 입지와 대규모 공업용지조성이 제한되고 있다. 수도권 2,300만명의 생활용수를 책임지는 팔당호 상

류에 위치한 상수원보호구역에 구리를 방출하게 되면 회복 불가능한 수질 오염이 우려된다. 팔당호 수자원이 한 번 오염되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명백한 이상, 개발과 투자의 당위성에 밀려 수도권 주민의 삶의 질, 기본적인 생존의 요건을 기회비용으로 지불할 수는 없다.

하이닉스 이천 공장 증설 문제는 정치적인 문제라기보다는 법률의 문제다. 수도권정비계획법, 환경정책기본법, 수질환경보전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 4개의 관련 법률을 재조정하는 것 이외에도 도시계획이나 토지이용에 대한 권한 등을 지킬 수



있는가 없는가, 이를 해체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논의해야 하는 총체적인 문제다. 수도권에 대한 자연보전권역 및 수질보전권역 등의 지정이 언제든 정치적 이유로 변경·해체될 수 있다면 과연 우리나라의 토지 이용 규제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

그렇기 때문에 하이닉스 공장 증설 문제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갈등으로 초점이 맞춰지는 것은 옳지 않다. 하이닉스가 지역간 공장 유치 경쟁이나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정치적 이슈로 되어 마치 정부가 아무데나 갈 수 있는 걸 결정하는 것처럼 왜곡되어서는 안 된다.

하이닉스 문제의 본질은 수도권 공장 증설 문제가 아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사실 '불허'라는 표현 자체도 잘못된 것이다. 법적으로 불허는 정부가 허가 혹은 불허를 결정할 수 있는 법정 재량권이 있을 때 가능하다. 이번 사안은 애초부터 허가할 수 없는 것이다. 수도권 지역의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최소한의 이 가이드라인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자 당연히 공권력을 이용해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다.

지난 1982년에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제정된 이후 자연보전권역 내에서는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공장을 증설하도록 허용한 점이 없었다는 것을 상기해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지 이용의 근본 가치 자체를 정치적 문제로 삼아 본질을 왜곡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게다가 이천 공장 증설이 허용된다면 이는 수도권 규제완화의 신호탄이 되는 것은 물론이다. 법 개정까지 강행해 이천 증설이 허용된다면, 지금까지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는 명목으로 첨단산업이나 외국기업에 대해 수도권

증설을 허용한 데 이어 전면적으로 기업에 수도권 규제완화의 신호탄으로 받아들여 질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나아가 지방균형발전 정책에 역행할 뿐 아니라 지방 황폐화를 불러올 것이다. 이 때문에 13개 비수도권 주민들은 모두 하이닉스 이천 공장 증설에 반대하는 한결같은 주장을 펴 왔다.

한편, 처음부터 설득력을 갖지 못했던 문제를 기업이 반도체 산업은 기술과 속도가 생존 요건이라는 투자명분을 앞세워 기업이 국가의 원칙과 제도마저 뒤집는 무리한 요구를 하고 나선 것도 유감이다. 또한 신속히 내렸어야 할 정책 결정이 지역이기주의에 발목 잡혀 미뤄진 것도 아쉬운 대목이다.

하이닉스 문제는 정치적 타협이나 힘의 논리가 아닌 법과 원칙에 따라 풀어야 한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인프라나 인력충원 등의 아쉬움이 있을 수 있지만, 지자체들은 앞 다투어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고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하는 등 기업을 유치하는 데 어느 때보다도 적극적이다.

또한 수도권 입지에 따른 기업의 부대비용이 높아지는 상황임에 반해, 지방에서는 기업 유치를 위해 온갖 다양한 혜택을 제시하며 기업하기 좋은 환경에 역점을 두고 있어 전망이 밝다. 오히려 적은 비용으로 최적의 조건에서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가능해진다는 얘기다. 이는 장기적으로는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감히 시도하지 못했었던 지역균형발전이 구체적인 결실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